



# 박근혜정부 출범과 전북의 대응과제

## Contents

- I.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와 전북의 대응방향
- II. 전북의 대응과제

# Issue Briefing



#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Issue Briefing

## C O N T E N T S

### 박근혜정부 출범과 전북의 대응과제

#### I.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와 전북의 대응방향

#### II. 전북의 대응과제

1. 일자리 창출 및 민생 중심의 창조경제 기반 구축 .....	4
2. 창의성 기반 융합산업으로 성장동력 강화 .....	10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 및 전북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13
4. 삶의 질(문화복지) 확대와 문화주도 지역발전 .....	17
5. 관광산업의 융복합화와 경쟁력 강화 .....	20
6.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어촌 삶의 질 개선 .....	23
7. 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	26
8. 지속가능한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	30
9. 지역성장 거점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 .....	33
10. 안전한 사회 및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36

**연구진** 이동기 연구위원, 이강진 연구위원, 정명희 연구위원, 장남정 연구위원, 이민수 연구위원,  
황영모 부연구위원, 장세길 부연구위원, 김재구 부연구위원,  
이중섭 부연구위원, 김시백 부연구위원, 김상엽 부연구위원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3년 3월 18일 vol.102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I.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와 전북의 대응방향

## 1.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 ■ 신정부의 최우선 국정방향, ‘국민행복’에 집중

- 신정부는 국민행복, 민생,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경기둔화, 낮은 출산율·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 기후변화와 에너지수급 불확실성, 사회 양극화, 안전 불감증 등으로 국민의 행복감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정책을 집중할 계획
  - 행복지수, OECD 34개국 중 한국 32위<sup>1)</sup> 최하위 수준으로 행복수준 향상에 총력

### ○ 국정운영 패러다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전환

- 기존의 양적 성장과 일방적 집행 방식의 국정운영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중심의 경제성장, 성장과 복지가 순환하는 순환형 국정운영, 소통과 성과를 중시하는 국정운영으로 패러다임 전환
- 국정 운영 기조를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함으로써 성장의 혜택을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분야	현재	미래
국정중심	선진국 추격형	세계시장 선도형
경제성장 모델	선진국 추격형	세계시장 선도형
	투입 중심 양적 성장 (경제성장률)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 (고용률)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 불균형 성장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
사회발전 패러다임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성장 → 복지) 단선적 인과관계	(성장 → 복지) 순환관계 인식
	물리적 자본 중시 (사회 기반시설)	사회적 자본 중시 (신뢰 공동체)
정부운영 방식	안전 불감증	안전 제일
	정부 주도·민간 순응	민관협력·소통
	정책집행 중심 부처 간 칸막이	정책평가 중심 부처 간 협력

### ■ 일자리, 고용·복지, 창의교육·문화, 안전과 통합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목표 추진

- 신정부는 창조경제 속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를 기반으로 삶의 질 제고, 안전과 통합 등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국정 운영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마련(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및 창의성, 인간 중심의 융합적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성장 잠재력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창조경제의 확산과 동력 강화에 집중
  - (국정과제의 주요 특징) 문화컨텐츠·SW·인문·예술과 융합한 신산업 창출, 국민행복 및 삶의 질과 연계된 과학기술 촉진, 인터넷 및 ICT 기반으로 빅데이터·초고속컴퓨팅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산업 육성, 소재·부품·뿌리산업 융합 확산, 중자·식품산업 육성, 유망 서비스 허브화 추진(의료·관광·교육·MICE 등), U턴 유망업종 전용산단 조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
- 맞춤형 고용·복지는 생애주기와 생활영역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고 탈빈곤 정책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복지-고용-성장간의 선순환 구조 마련
  - (국정과제의 주요 특징) 보건의료 R&D 기반 구축,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청소년 쉼터 및 상설인터넷 치유학교 등 인프라 구축, 국가차매관리체계 구축 및 독거노인 돌봄 강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인성교육 및 맞춤형 진로교육, 능력중심 사회 및 일-교육·훈련

1) 이내찬(2012).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격이 연계되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 문화예술 진흥 기반 확대
- (국정과제의 주요 특징) 행복학습지원센터 설립,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복합문화커뮤니센터 조성, 무형문화유산 법률제정 및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국립승격 등
-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범죄 및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화합과 지속적 환경 기반 구축으로 목표설정**
- (국정과제의 주요특징) 4대 폭력 근절, 폭력피해 치료·재활 지원체계 구축, 보호시설 확충, 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범죄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구축,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및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섬진강 동서통합시대 조성 등



## 2. 전라북도의 대응방향

### ■ 신정부 정책기조 및 국정전략과 연계한 전북공약사업의 확대·발전

- 새만금, 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미생물융복합 과학기술원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전북 공약사업 등을 새정부의 정책기조 및 국정전략과 연계를 통해 확대·발전시키고 지속적인 대응
- 지역공약인 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의 휴양·힐링의 일번지로 조성하고, 고도 익산르네상스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중점과제	주요내용	비고
새만금사업조기개발	새만금사업 1단계('17년) 완료, 세계3대위기(식량,에너지, 물) 대응의 전략적 기지	85.7km <sup>2</sup> 의 농업용지, 20.3km <sup>2</sup> 의 신재생에너지단지, 11,800ha의 새만금 담수호 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국민연금공단본사와 일괄이전을 통한 효율성 제고(본사-연금연수원-기금운용본부의 기능연계)	대통령, 후보시설 전북이전 필요성 언급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국가연구개발 R&D 중심산업 육성(국정과제), 전북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구비	농생명·식품 융복합산업과 친환경복합소재 특화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원 건립	국정과제인 융합에 부합, 미생물융합분야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원 설립 필요	'14~'17년까지 4,000억원 투자사업으로 국가차원의 대표적 융복합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	신정부의 식품 육성 정책에 부합, 2015년 완공 및 2단계 확대 추진	총사업비 5,535억원 투자사업으로 2만여명 고용창출 및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휘
고도익산르네상스 조성	전통문화유산보호 및 관광자원화 추진 사업 (지역공약)	고도보존 육성 역사마을조성, 고도육성기반구축, 백제무왕테마파크, 역사박물관 등 조성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	힐링에 대한 국민적 수요 대응 및 동부권의 기구축된 자원을 기반으로 국제적 힐링 거점 조성 (지역공약)	산림휴양단지, 동물매개치유단지, 식약동원연수센터 등 조성

## ■ 국정과제와 연계해 전라북도의 주요 분야별 기존 사업의 확장 및 신규 사업 발굴·추진

-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국정과제와 연계된 예타 대상 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사업 반영 및 예산 확보 추진
  - 예타대상사업 : 예) 탄소산업 R&D 과제, 민간육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로컬푸드, U턴산업단지 조성, 익산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등
  - 국가예산사업 : 예) 뿌리산업 파일럿플랜트 구축, 탄소상용화지원센터, 농자재유통센터, 장애인예술창작지원센터, 어울림스포츠센터, 행복학습지원센터 등
- 국정과제 연계 및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중심 포럼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시의적절한 사업 제안
  - 분과구성 : 산업경제, 지역개발, SOC, 농업농촌, 환경, 문화관광, 사회복지, 새만금
  - 구성방식 : 현 국가정책 트렌트와 전북도의 신성장동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전문가 및 현장가 중심의 포럼 운영
  - 향후계획 : 포럼별 총 4회 및 전체회의 개최, 신규 국책사업 아젠다 및 사업(안) 제시 (5월), 2013년 하반기 예타 추진
- 전라북도 및 전북발전연구원 중심의 추진조직을 통한 지속적 대응과 성과 달성
  -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사업 발굴 및 지속적 대응을 위해 현재 행정부지사 주재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 공동으로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대응 중
  - 전라북도 실·국 중심의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 국정과제와 부처별 업무보고서를 분석하여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2014년 국가예산사업 및 연계·확대 사업 발굴
  - 전북발전연구원 중심의 새정부 전북의 대응과제 발굴 : 전북발전의 핵심과제(아젠다) 제시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분야별 사업 제안 등
- 전북발전연구원은 첫 대응으로 신정부의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에 기반하고, 현 전북 도정의 중점 방향을 고려하여 10대 아젠다(과제)를 선정, 아젠다별 대응 방향을 제시
  -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전라북도 10대 대응 과제' 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
  - 체계적인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4단계로 구분된 대응을 통해 사업의 구체화 및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대응방식과 결과물 공유방식 설정)

〈전북발전연구원 신정부 국정대응 로드맵〉

단 계	단계별 주요내용	
1단계	➔ 이슈브리핑 (발간)	신정부 국정과제(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과제 분석) + 전북 주요도정 방향 → 아젠다별 대응과제 제안
2단계	➔ 분야별 이슈브리핑 (발간)	주요 국정 분야별 분석 및 대응방향 제안
3단계	➔ 세미나 (개최)	인수위원 또는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새정부 정책기조 및 전북 발전방향 관련 세미나 추진 ※주제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전북의 발전방향 모색(3월말)
4단계	➔ 종합보고서 (발간)	단계별(1+2+3단계)종합축약, 국정과제별 구체적 내용 및 전북사업 추진 가능성 진단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발간



〈그림-1〉 전라북도 국정과제 대응 10대 과제

## II. 전북의 대응과제



### 일자리창출, 민생중심의 창조경제 기반 구축

#### 1.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U턴기업 유치, 청년창업 활성화로 창조경제 육성**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망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의 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높은 고용효과를 가진 U턴 기업의 적극적 유치 및 지원체계 구축
  -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청년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대학의 희망창업 기지화로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화**
  - 중소-중견기업 정책 연계 강화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에 필요한 청년창업가 양성을 위해 대학의 희망 창업기지화, 성공창업의 맞춤형 지원
  - 시설현대화와 지역의 문화관광과 연계한 특화시장 육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장년층 전직지원등 취업지원 강화로 고용률 제고**
  - 구인-구직자 매칭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과 고용서비스 망 연계강화를 통해 고용률 제고
  - 인생 이모작을 위한 '숙련진단 및 경력경로 설계' 중장년층 취업아카데미 개설 등 전직훈련의 활성화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중심 직업교육 강화

#### 2.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 **서비스산업의 융합화, 서비스산업 특화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및 육성방안 마련,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성장 동력화 추진
    - 서비스 산업 발전 여건이 미약한 현실을 고려하여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연계한 전북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모색, 서비스산업 특화사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수립 필요

## ■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위한 기술협력 강화, 주얼리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U턴기업 유치 활성화,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기반 마련 및 지원체계 강화
  - 전북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성장지원 차원의 대중소 기업간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 구매상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펀드 조성 등 추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통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 축적으로 상생의 기반 마련
- U턴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전용산단조성, 공동 R&D 센터 구축, 인력양성기반 시설 등이 포함되는 주얼리산업 클러스터 구축
  - 주얼리기업을 모델로 한 U턴기업 투자지원, 전용산단 조성, 맞춤형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으로 U턴기업의 적극적 유치 추진 및 주얼리산업 클러스터 구축
  - 소규모 협력업체 동반 U턴 유인책 마련을 위해 U턴기업지원법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 마련, 부품소재산업 U턴기업 발굴·추진 필요
- 적극적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의무고용제도 추진에 따라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
  - 전국적 수범사업인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확대(2012년 14개 팀 44명 육성) 및 이들의 자립기반확보를 위한 중간지원체계 강화, 청년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청년일자리 확대, 고졸 특별채용(2012년 83명)등 청년취업의 기회 제공 사업의 확대
  -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과정 확대·운영을 통해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도산하 출연기관 평가시 고졸 및 청년채용 실적 반영으로 청년채용확대 선도

## ■ 산학관커플링 사업, 중장년층 전직서비스 강화, 현장연계 직업교육 강화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중심 도정 운영 기반 강화

-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현재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을 위해 실국별 일자리 전담조직(1실 14과 4개 분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청년취업2000', '산학관커플링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
  - 일자리 전담조직의 내실화, 전북일자리종합센터의 기능강화와 이를 주축으로 Work-Net를 통한 구인-구직 알선, 지역 워크넷서비스 등 일자리 연계사업 강화
- 중장년층 취업지원강화를 위한 '중장년 희망일자리센터' 확대 운영, 중장년층 전직지원 의무 부과 제도를 우선 시행, 퇴직인력의 전문성 활용사업 등 운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장년층의 전직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종합센터 내 전직지원센터 CTP실 개소, 405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시행 등 중장년층 대상 사업 강화
  - 중장년 전직을 위한 '전북 중장년 희망일자리센터' 확대 운영, 퇴직인력의 전문성 활용사업의 강화
  -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산학관 커플링 현장연계 사업의 지속적 추진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청년의 창조형 중소기업 창업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지역발전 주역화**

-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주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마련,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술혁신, 마케팅, 수출 지원과 맞춤형 인력양성-공급과 기업애로 해소지원 추진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사업 확대, 부처별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지원 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부부처 정책사업과 연계사업 확대
-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가 양성, 투자 중심 자금조달체계 마련, 창업아카데미의 운영 등 성공창업의 맞춤형 지원**
  - 2007년도부터 희망 창업 프로그램 운영하여 창업 지원 (교육 1,893명, 창업 1,194명)하고 있으며 창업 후 지원 강화 사업 발굴 필요
  - 사관학교식 창업형 청년 기술창업자 육성을 위해 대학 및 고등학교와 연계한 정부공모 사업 추진
- **전통시장의 특성화 촉진과 시설현대화 사업의 민간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171개 시장에서 추진, 특성화시장 2개소 육성, 온누리상품권 272억 판매 등의 성과를 토대로 특화시장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확대를 위한 범 도민운동 전개
  - 전통시장 육성 및 특성화를 위해 시장별 종합계획 수립, 연차적 환경개선 사업 추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특징	국정과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li> <li>-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li> <li>- 투자유치 강화</li> <li>- 청년의 사회적 참여 함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고부가가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li> <li>- 서비스기반 부족한 한계 극복방안 모색</li> </ul> </li> <li>•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생산성과 기술력 제고</li> <li>-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강화</li> </ul> </li> <li>• 투자유치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턴기업의 성공적 정착, U턴기업의 발굴</li> <li>- U턴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li> </ul> </li> <li>•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li> <li>-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참여 유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희망 사다리 구축</li> <li>- 청년창업가 양성</li> <li>- 전통시장 활성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지원강화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li> </ul> </li> <li>• 청년창업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창업의 맞춤형 지원</li> </ul> </li> <li>• 전통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별 특화시장 육성, 전통시장 현대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스매치 해소</li> <li>-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li> <li>- 전문인재 양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크넷의 활성화, 일자리 연계 기능의 강화</li> </ul> </li> <li>• 중장년층 취업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아카데미, 전직훈련 활성화</li> </ul> </li> </ul>

- 국정기조와 전북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과제
-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신규 반영해야할 과제

## 아젠다

## 2

## 창의성 기반 융합 산업으로 성장 동력 강화

## 1.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 ■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 강화·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

- 창조산업의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 전반의 법률 및 기본계획 수립
  - 창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및 제1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뿌리산업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및 서비스산업 장단기 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등
- 다양한 기능을 가진 관광+산업 클러스터와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기대, 특히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예상

## ■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지역별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별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성 산업 위주로 시도 자율로 기획하고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지역 거점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지역산업육성산업을 광역-신평화사업으로 단순화하여 광역선도사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지역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신평화산업은 성장성이 큰 지역 산업 지원에 초점
-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업별 미니 R&D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R&D 중심 산업으로 전환 촉진
  - 지역별 거점대학을 인근의 산업 수요를 고려한 R&D 지원 강화로 지역산업 수요기술 공급처로 육성
  - 보건산업 및 고령 친화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 대학원 추가 지정
- U턴 기업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산업특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전자부품, 전기장비, 의류, 가방·신발, 운송장비 5개 업종에 대해 U턴 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U턴 유망업종 전용산단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집단 U턴 유치 활성화

## ■ 융합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IT, 문화, 보건산업 등 서비스 산업 부각

- 지식융합 전문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IT+제조 융합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과 체계적인 확산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기존의 IT융합혁신센터를 4개에서 10개로 확대 구축하고 미래 선도 부품 개발 및 실증·테스트 지원
  - 제조+서비스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서비스산업(기계설비 애프터마켓, e-트레이닝 등)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해 기존의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소 및 지원 기관의 기능 강화 및 재조정 추진

- 제조업 이외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보건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등을 육성
  - 내수·복제품 위주의 보건산업을 수출·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하여 2017년까지 세계 7대 보건산업 강국으로 육성,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 증진·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2.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 ■ 4대 전략산업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전북 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

-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창조산업 및 융복합 클러스터 관련 내용 심층 진단을 통해 대응전략 마련과 전라북도 유치 가능한 사업 발굴
  - 부품·소재 및 뿌리산업의 융복합화 확산을 위한 시장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사업 및 예타 사업 발굴
-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탄소밸리사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를 탄소복합제 생산거점으로 구축하여 기술 상용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항공산업 핵심부품 기술 개발 등으로 신산업 창출 모색
  - 식품산업은 기추진하고 있는 종사산업 외에 식품소재산업, 식품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및 친고령화산업, 관광과 접목한 융합클러스터 추진
  - 녹색에너지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IT산업이 융합된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추진
- IT기술을 활용하여 뿌리산업의 작업환경을 고도화할 수 있는 뿌리산업 공동활용 파일럿 플랜트 구축 추진
  - 부품·소재 관련 시험생산·분석·평가장비 등을 구축하여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여 관련 산업의 환경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 효과 발휘

### ■ IT 융합혁신센터 구축 및 융합 선도대학 지정...역량 강화 위한 체계 구축

- '지역 과학기술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기술-인재-산업을 연계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체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여 지자체가 지역 내 산·학·연 자원발굴과 기술혁신 수요에 지원가능한 역량 육성
  - 지식경제부의 '인재육성형 산학협력 선도기업 지원사업' (우수 인력 양성 중소기업·중견기업 인재육성 선도기업으로 지정·인증 및 R&D 등 인센티브 부여)을 활용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체제 정비
- 지역 내 거점 대학별로 산업 수요를 고려한 R&D 지원을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출연연구원의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지역 내 융합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특화 SW 융합학과 육성 및 대학 SW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으로 지역산업 수요기술 공급처 육성 전략 마련
- IT 융합혁신센터 구축을 통해 부품 개발 및 실증·테스트 지원
  - 현재 자동차(의왕), 조선(울산) 등 4개소에 입지한 IT융합 혁신센터의 10개소 확대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식품 및 녹색에너지 분야 IT 융합혁신센터'를 유치를 위한 준비

■ 고령친화산업 R&D 시설 유치 및 시범사업 유치...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인 보건산업과 고령 친화산업을 전라북도의 한의학 및 식품산업과 연계한 의료산업의 메카로 도약
  - 의료 기기 등 첨단 전자 제품보다는 의료 기술 및 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둔 산업 육성으로 의료관광 부문과 접목된 부가적 효과 기대
-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R&D 지원을 위한 대학 및 연구 시설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특성화 대학원 지정·설립 등을 검토하고, 연구중심병원 육성방안 마련
  -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지정 대학은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고령친화 전문대학원 등이며 연구기능은 연구중심병원과 친고령산업 연구지원센터임
  - 이 중 전라북도 여건에 부합하는 연구중심병원과 친고령산업 연구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기능 추가 지정 또는 신설 대응 신설
- 동서의료기술 R&D 사업 발굴 및 제안
  - 전북내 대학의 한의학 및 양의학을 통합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시설을 유치하고 진안군 아토피 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U-Health, PHR 등 융복합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특징	국정과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도적 기반구축 강화 - 창조산업 육성 관련 법률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전복유치 가능한 사업 선정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 지역거점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 U턴 기업 유치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전복사업의 국가사업화 - 전략산업의 융복합화 - 뿌리산업 구조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미래성장산업 육성 - IT+제조 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 보건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R&amp;D 역량 강화 - 인력육성형 중소기업 지원 - 지역거점대학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신산업창조프로젝트, 국민행복프로젝트 등 창조산업 관련 사업 선제 대응</li> <li>▶ • 탄소융합재 생산거점 구축</li> <li>▶ • 식품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li> <li>▶ •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조성</li> <li>▶ • 뿌리산업 공동활용 파일럿 플랜트 구축</li> <li>▶ • 지역 과학기술 역량강화사업</li> <li>▶ • IT융합혁신센터 유치</li> <li>▶ • 의료 융합기술 연구중심병원 및 친고령 산업 연구지원센터 유치</li> <li>▶ • 동서의료기술 R&amp;D 및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li> </ul>

- 국정기조와 전북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과제
-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신규 반영해야할 과제

## 아젠다 3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과 전복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1.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 ■ 생애주기별 정책내용의 차별화와 다양화

- 정책대상별로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향상
- 생애주기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7~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사회안전망을 수립하여 욕구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 영유아는 보육, 아동과 청소년은 안전과 교육, 청장년층은 실업과 주거 욕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노인은 빈곤과 치매, 장애인은 차별과 고용, 그리고 빈곤계층은 소득수준별 생계와 의료 등의 욕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 구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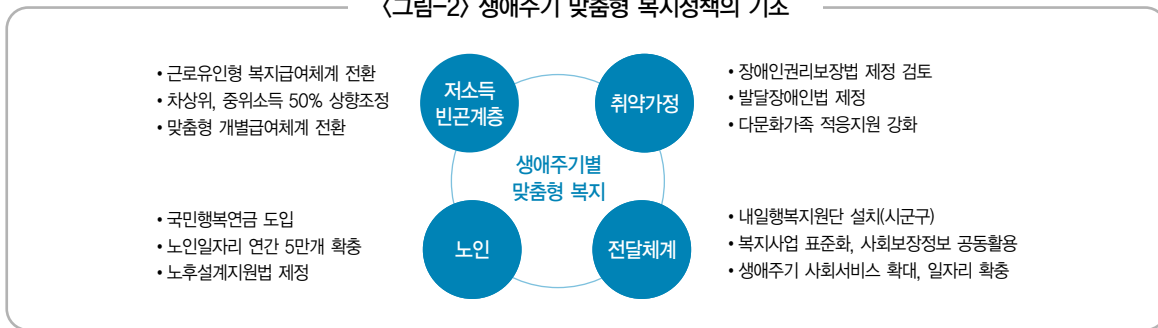
### ■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지원내용의 확대

- 신규사업의 개발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편을 통해 복지수혜 대상과 사업 확대
  - ①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도 현재 A값의 5%에서 10%로 확대 ② 노인일자리는 연간 5만개 이상 확대하고, 월보수도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확대, ③ 빈곤층도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을 중위소득 50%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 빈곤정책 대상 확대할 계획
- 복지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급여의 지양과 고용을 연계한 근로유인형 복지급여체계로의 개편 추진
- 노후빈곤완화를 위한 기초연금제도(국민행복연금) 도입
  -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대상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예정

### ■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센터 중심의 맞춤형 고용복지연계체계 구축
  - 시군구 내일행복지원단 설치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일자리 지원 통합
- 복지사업 표준화와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 지역중심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포괄보조 확대 및 사회서비스 R&D 예산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개발

〈그림-2〉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정책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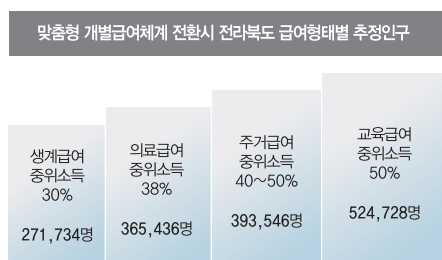


## 2.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 ■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노인일자리사업 차등보조율 상향 조정 제시

- 빈곤선 상향조정, 기초노령연금 확대,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노인일자리 확대 등 신정부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전라북도의 재정부담은 매우 심화될 것으로 추정
  - 신정부의 중요 정책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될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시 2014년 기준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재정규모는 최소 5,824억원 최대 6,5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현재 차등보조기준(재정자주도+노인인구비율) 적용시 전라북도 부담액은 2013년 543억원에서 1,165억원으로 증가 추정
-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기준 재설정(재정자주도+기초노령연금수급자비율), 재정자주도 구간 세분화, 영유아보육료 중앙부담 확대 및 차등보조 기준 적용 등 전라북도 재정부담 완화방안 제시 필요

### ■ 전북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통폐합 및 광역화



- 소득정도에 따라 급여형태별로 급여체계를 달리할 경우 각 단계별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 현재 개별급여체계에서 맞춤형급여체계로 전환시 기초수급자는 약 10만명에서 최소 27만명으로 두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빈곤정책 전환에 따른 빈곤수요 추정과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등 각 분야별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 마련 필요

### ■ 농촌지역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학교-지역아동센터' 돌봄사업간 대상 및 사업 조정

- 보육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 중심으로 국공립·공공형 어린이 집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도 연계방안 마련 필요
  - '17년까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맞춰 농촌지역 보육인프라 개선방안 제시, 어린이집 품질조력, 컨설팅 제공계획과 연계
  - 권역별 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센터 설치운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검토

-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돌봄사업간의 연계 조정방안 마련
  - 학교 내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온종일 돌봄학교(교과부) 연계 지원체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경로당 중심 농촌지역 복지시설 복합화 시범 추진

- 도농간 복지격차 심화와 농촌지역 취약한 복지인프라 개선대책 강구
  - 도시지역에 집중된 복지전달체계로 인한 농촌지역 복지불평등 해소 필요성 제시 및 농촌형 복지전달체계 모형 제시 필요
- 농촌지역 복지수요에 맞춰 마을회관,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주요 복지시설 기능전환방안 제시, 정부 농촌복지정책 방향과 전북형 농촌복지 연계 모형 수립 필요
  -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복지부의 농촌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돌봄과 여가기능 수행을 위한 농촌복지종합센터 전환 방향 제시 필요

## ■ 지역사회서비스 성과관리제 및 품질인증제 도입

- 사회서비스 산업화 확대전략에 대응한 지역 사회서비스 시장 규모 분석 및 추정 필요, 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확대에 따른 각 분야별 사업의 과학적 성과관리 방안 마련과 사회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각 영역별 지표관리 및 제공인력 전문화 방안 마련 필요
- 복지사업의 생애주기별 분류를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분야 및 산업화 분야 발굴 필요
  - 생애주기별 복지수요와 정책의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파악 후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와 연계 필요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부족한 농촌인력은 지역자활센터와 건강한 노인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사업 개발 및 사례관리 연계 조정 방안 마련

## ■ 전북광역자활센터 내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신설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부 설치 제안

- 고용-복지연계 제도 도입에 따른 근로빈곤계층 수요파악
  -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개별급여체계 전환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추정과 자활사업 확대에 따른 전북형 빈곤탈출을 제고 방안 마련
-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전환에 필요한 역량 분석 필요
  -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발굴
  - 광역자활센터 내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 지원 전담 부서 조직' 검토 필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부 독립 제안, 노인일자리+노후설계+사회참여활동 지원 필요
  - 신정부 출범이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고령화사회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법예고 2013. 4월),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 전북지부의 설치 제안

## ■ 산·학·관 커풀링사업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확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 대학 특성화에 대응, 전라북도 산·학·관 커풀링 사업 확대 필요
  - 산·학·관 커풀링사업은 2007년 이공 계열부터 시작하여 2013년 현재 상대적으로 취업문이 좁은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열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바, 산·학·관 커풀링사업을 통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육성 및 확대를 통한 전문 인재 양성
  - 지역산업정책·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중앙의 소관부처, 전라북도, 도내 산업체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육성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도내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가 확대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100세 시대에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 취미 및 여가생활(노년층), 창업·전직지원(장년층) 등 세대별 수요를 고려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저학력자,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의 수요 맞춤형 개발 및 활성화 필요.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지역 행복평생학습센터 설치 검토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특징	국정과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정책내용 차별화와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li> <li>-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 단계별 사회안전망 수립</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의 분류 및 복지사각 지대 발굴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별 복지예산 편성 및 복지사업 분류</li> <li>• 전북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모형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지원내용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 빈곤선 제도 도입 (중위소득 50% 구간 기준)</li> <li>- 기초노령연금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li> <li>-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정책수요 분석 및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li> <li>• 빈곤정책 전달체계의 탈빈곤 확대 중심으로 개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노인일자리사업 차등보조율 상향조정 제시</li> <li>• 급여형태별 정책수요 분석 및 성과별 정책목표 수립</li> <li>•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광역화</li> <li>• 농촌지역 공보육 인프라 확충</li> <li>• 권역별 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센터 설치 운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검토</li> <li>• 학교-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의 역할 및 기능조정과 사업연계</li> <li>•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내일행복지원단 설치</li> <li>-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li> <li>• 양질의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li> <li>• 특성화교육 확대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li> <li>• 도농복지격차 해소와 농촌복지전달체계 개편</li> <li>• 읍면동 중심 도입 체험형 복지전달체계 수립</li> <li>• 고용+복지 연계 복지전달체계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확대</li> <li>• 산·학·관 커풀링 사업 확대</li> <li>•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전북평생학습진흥원 설립, 지역 행복평생학습센터 설치</li> <li>• 마을회관, 경로당 중심 복지시설 복합화 방안 제시</li> <li>• 농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중앙정부 시범사업 연계</li> <li>• 읍면동 중심 보건복지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li> <li>• 협동조합 전환 가능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육성</li> <li>• 광역자활센터 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원 전담 부서 신설</li> <li>•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부 설립 제안</li> </ul>

- 국정기조와 전북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과제
-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신규 반영해야할 과제

## 아젠다 4

### 삶의 질(문화복지) 확대와 문화주도 지역발전

#### 1.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 ■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진흥 강조...삶의 질 향상 위한 문화복지 강화

- 문화향유의 도농·소득·연령대별 양극화를 해소하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정책 강화
  - 문화복지 3요소(문화시설-매개인력-프로그램)별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 부여. 특히 리모델링(예, 주민자치센터) 통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모든 학교(11,5321개)에 문화예술교육사(예술강사) 배치, 미취학아동/초중고생/대학생·청년/직장인/일반국민/노년층별 프로그램 개발 등이 특징
- 유네스코의 문화와 발전 의제에 대한 결의안(A/RES/65/166, A/RES/66/442) 채택 이후 강조되고 있는 문화자원 활용 지역발전(개발)전략을 담은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본격화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통해 기존 문화도시 외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의 문화도시 추가 선정·지원하고, 마을단위의 문화주도 지역발전전략으로 문화마을 선정·지원(현, 국책연구기관 용역 의뢰)
- 기타 특징적 사업으로 권역별 체류형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 포함

##### ■ 보존에서 활용으로 문화유산 정책전환 본격화...한국학(한국정신)과 무형유산 부각

- 기존의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활용전략에서 무형문화유산 활용전략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등을 연계한 정신문화 진작 강조
  -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관한 법률 제정 통한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 최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전통문화포럼에서 한스타일(2007~2011) 사업 추진 시 한국학이 제외된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한국학·정신문화 진작을 강조
-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문화교류(예, 문화ODA)가 대폭 확대될 전망

##### ■ 문화융성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 강화...문화계 숙원사업 해결 기대

- 문화부문 국정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문화기본법 및 연계 법률 제정
  - 지역문화진흥법(2012.6, 이병석의원, 2012.8, 도종환의원), 여가활성화기본법(2013.1, 남경필의원), 무형문화유산보존및진흥법(2012.11, 조해진의원), 공예문화산업진흥법(2013.1, 윤관석의원) 발의됐으며,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은 2013년 제정 목표로 추진 예정
- 문화계의 숙원사업(예, 문화복지, 문화인력의 제도화, 문화도시 지정·지원, 무형유산의 보존·활용, 매세나 활성화)을 해결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2.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 ■ 전북 삶의 질 정책 국가사업화 추진...지역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 전북도가 삶의 질 정책(문화복지)으로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문화매개인력(문화복지전문인력, 문화코디네이터, 작은도서관 문화기획자, 박물관·미술관 큐레이터) 지원, 복합문화센터(작은영화관, 작은박물관·미술관, 시민예술촌), 장애인 전용문화공간 등이 문화부문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
- 전북의 생활밀착형 삶의 질 5대 시설, 주민자치센터의 복합문화공간화, 동호회의 창작·연습공간으로서 시민예술촌, 장애인 전용 문화공간 조성 등이 국가사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
  - 예) 2012년 문화복지전문인력 배치사업은 당초 경기·부산을 시범지역으로 계획했으나, 전북에서 문화코디네이터 배치를 추진함에 따라 경기 대신 전북이 시범지로 선정. 지난해부터 20명 배치돼 취약계층 문화복지 전달
  - 예) 문화체육관광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선진사례로 작은영화관 사업 모델인 장수한누리영화관 벤치마킹

### ■ 문화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문화매개인력 적극 양성...역량 강화 위한 체계 구축

- 국정과제에 11,532개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한다는 계획 포함돼 있으며, 새롭게 문화복지사(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추진) 육성해 전국 읍면동별로 배치한다는 장기계획 추진 중
  - 전라북도는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기관으로 백제예대와 예원대가 선정
- 문화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사 양성기관 확충하고, 향후 배치된 인력 통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 제2의 한옥마을 위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차별화된 테마선정, 민간협력체계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통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 추가로 문화도시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생활공동체 차원의 문화마을 사업도 구상
- 제2의 한옥마을(전주전통문화도시)이 탄생할 수 있도록 법 제정 이전에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위한 전략 마련. 지자체-민간단체-정치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테마 선정, 조성 계획 수립: 13개 시군은 문화도시, 240여개 읍면동은 문화마을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해 연구용역 의뢰 중이나, 대체로 유럽의 문화도시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전략을 지자체별로 마련

### ■ 한문화 거점전략으로서 무형문화유산 수도 추진...전북의 정신 발굴, 한국의 정신문화화

- 전북(전주)에 유치된 유네스코아태센터, 국립무형유산원 활용한 글로벌프로젝트(문화ODA, 아태무형유산축제, 국제회의 등)를 적극적으로 발굴, 한문화 거점전략 중 하나로서 전라북도를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거점 및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수도로 조성하는 전략 추진

- 서원·향교 등 문화관광자원화,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 국제문화교류, 문화ODA 등은 전라북도 경쟁력이 높지 않은 분야. 특히 한국학·정신문화 및 글로벌 분야의 대응전략 마련 시급
  - 기존의 정신문화 진작사업은 안동 국학진흥원 통한 유교문화가 주축. 호남의 한국학과 정신문화 총괄하는 거점기관이 시급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한국의 대표 정신문화로 육성 추진

■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전북도 방안 마련, 정부 반영 추진**

- 전북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이 국정과제에 포함. 도·시·정지권 협조체계 구축해 전북이 요구하는 조직·기구·정원·예산안이 반영되도록 노력
  -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될 경우 익산 국립박물관 건립(200억원 예상)과 함께 인원 확충(현 11명 → 30명 내외), 예산 증액(현 12여억원 → 30여억원), 관광객 증가 등의 직·간접적 효과 기대

■ **새로운 문화자원으로서 순수예술·인디장르 활성화·복합문화예술시설 조성 요구**

-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 확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등 순수예술에 대한 창작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인디밴드 및 뮤지션 창작지원 강화가 주요계획에 포함. 전라북도 순수예술 창작지원과 인디밴드 등 대중문화 활성화 및 새로운 지역문화자원화 위한 종합지원·활성화 추진
- 서울 합정동 구(舊)당인리발전소와 서계동 구기무사 수송대를 복합문화예술시설로 조성하는 계획 포함. 지역 내 구산업시설·군사시설 파악해 계획 수립, 복합문화시설 추가 조성 제안
- 인디뮤지션 연습·창작공간 음악창작소, 시도별 장애인 예술창작지원센터 등 유치 및 대응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특징	국정과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문화인력 배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li> <li>- 문화도시 추가, 문화마을 신규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삶의 질 주요 시책, 국가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시민예술촌 등</li> <li>- 정부 추진 문화시설의 지역유치 추진 등</li> </ul> </li> <li>▶ 문화일자리, 문화매개인력 적극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사 양성 확대</li> </ul> </li> <li>▶ 제2한옥마을을 위한 문화도시, 문화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문화도시, 읍면동 문화마을 전략수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질 5대 시책(특히 시민 예술촌, 작은영화관) 국가사업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li> <li>• 권역별 체류형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유치, 조성</li> <li>• 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사 양성 확대 및 관리체계 구축</li> <li>• 13개(전주 제외) 문화도시 선정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li> <li>• 읍면동별 문화마을 선정 추진</li> <li>• 인디뮤지션 음악창작소 조성</li> <li>• 장애인 예술창작지원센터 건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의 활용정책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문화 중심에서 무형문화 강조</li> <li>- 한국학과 정신문화 진작 중점 추진</li> <li>- 문화ODA 등 국제문화교류 증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예술, 인디장르 종합지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예술 창작지원, 대중문화 활성화 추진</li> </ul> </li> <li>▶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전북도 요구안 반영 노력</li> <li>▶ 무형문화유산의 수도 조성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지역 거점화, 국제화, 산업화 방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박물관 승격 전북안 마련</li> <li>▶ 무형문화유산 수도 전략 마련.</li> <li>▶ 한국학·정신문화 관련 호남지역 거점 기관 설립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도적 기반구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본법 등 7~8개 법제정 추진</li> <li>- 문화매개인력, 매세나 등 제도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정추진 법률안 검토, 전북유치 가능한 사업선정(先)대응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 법률(무형문화유산법,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대응</li> </ul>

- 국정기조와 전북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과제
-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신규 반영해야 할 과제

아젠다

5

## 관광산업의 융복합화와 경쟁력 강화

### 1.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 ■ 관광산업의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균형...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지속

-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관광정책은 관광산업의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균형발전으로 압축
  -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지속확대, 국내관광 활성화, 관광수지 개선이라는 관광시장의 양적성장과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관광복지 실현이라는 관광산업의 질적성장정책 추진 예정
- 관광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는 한편 관광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관광산업 체질개선 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 MICE, 의료관광, 한류관광, 크루즈 관광,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레저·스포츠 관광
  -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 도입 등 관광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관광산업 체질개선 정책 제시

#### ■ 관광양극화 해소 및 국내관광 활성화...지역관광활성화 정책 강화

- 외래관광객의 서울·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강화
  - 서울·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통한 외래관광시장 규모 지속확대와 내국인 국내관광 침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본격 추진 예상 (※ 국민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09년 9.04일 → '11년 6.69일)
- 자연·생태기반 관광상품 개발,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관광숙박산업의 다양성 확대, '올해의 문화관광도시' 지정 등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과 관광권(觀光圈) 정비사업 추진 예상

#### ■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창조관광기업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강화

- 관광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고용창출이 높기 때문에, 새정부에서도 의료·교육·스포츠·종교 등 다른 산업들과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 영역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예정
  - 국내 관광산업의 일자리 기여도 5.6% vs 전 세계 관광산업 일자리 기여도 평균 8.7%
- 창조관광기업 발굴·지원, 숙박시설 서비스 인력 양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동반한 관광산업 성장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 이(異)업종 분야와 관광산업의 융복합화 지원...관광산업의 영역확대와 체질개선

- 고품격 관광상품 및 창조적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니즈의 증가로 이(異)업종 분야와 융복합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체질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강화될 전망
  - 문화예술 및 한류 등과 접목한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학습관광과 체험프로그램 강화 정책과 이를 위한 인력양성 정책이 추진·지원될 것으로 예상

## 2.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 ■ 전라북도 전략관광산업 선정 및 집중 육성...MICE, 한류관광산업 지원방안 요구

-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규모확대 및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관광·레저산업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관광산업 집중육성 및 국고지원 요구 필요
  - 추진 중인 전주 컨벤션센터와 무주, 부안을 연계한 MICE 산업 육성방안, 한류체험 관광상품 개발과 한류문화관광산업 거점 조성, 산악·해양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국가지원 요구
- 전라북도가 2013년 관광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발전비전과 전략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구상수립 중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대응방안 구상

### ■ 관광복지 선도사업 국정과제 반영...동부권 휴양·힐링거점 조성사업 국가사업으로 추진

- 새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힐링(Healing)과 여행치유센터,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인프라 조성 등 관광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 전라북도 동부권의 휴양·힐링거점 조성사업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관광거점사업을 국가사업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동부권 구상사업: 임실 식생활 교육연수센터, 진안 산림치유단지, 장수 동물매개치유단지 등

### ■ 외래관광시장 확대 및 관광인프라 개선...중국관광시장 적극공략

- 국내 외래관광객이 2012년 1,000만명을 돌파하였으나 전라북도 외래관광시장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중국관광시장 등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필요
- 이를 위해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숙박시설 매력성 향상, 교통편의성 강화 등 관광수용태세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고품격 관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필요

### ■ “문화관광도시”육성계획수립...도심관광 활성화 방안 및 관광지 재생사업 계획수립

- 정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지역방문의 해 사업’의 대안으로 지방도시 중심의 ‘올해의 문화관광도시’ 선정을 통해 홍보마케팅, 숙박, 안내체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전주, 군산근대문화도시, 익산고도르네상스 등 전라북도의 도심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도시경관 디자인 정비, 역사문화유산의 복원 및 정비,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축제 및 이벤트 등 다양한 도시관광 프로그램 구상을 포함한 관광특구 조성 구상 필요
-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 변산 등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전라북도와 국가가 협력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 ■ 전라북도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종교관광, 음식관광, 슬로시티 등 특화 관광콘텐츠 육성

- 전라북도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상품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브랜드 구축
  - 세계순례대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관광,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음식관광, 슬로시티 등의 사업 지속추진
- 가족이 함께하는 학습관광과 토요체험프로그램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관광산업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창조관광기업 육성 및 장인공방촌 육성**

- 창조관광기업을 발굴·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주요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관광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지역단위 관광비즈니스 모델 창출
- 장인공방촌 등 문화산업과 연계한 관광일자리 창출 등 관광서비스 인력양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벨류투어리즘(Value Tourism) 육성**

- 문화예술, 학습, 의료 등 “예술이나 자아발견”과 같은 가치(value)에 대한 만족을 통해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 필요
- 관광산업이 다양한 영역(문화, 의료, 학습)으로 확장됨에 따라 자산에 가치가 더해지고 스토리 지식 산업과 결합한 관광산업의 집약화·고도화 전략(Value Marketing) 수립

■ **기타 관광산업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대체휴무제, 한국형체크바캉스 제도 등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필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특징	국정과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li> <li>- 관광복지 실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형 전략관광산업 육성</li> <li>• 관광복지 선도사업 국가사업으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CE, 한류문화관광산업 육성</li> <li>• 동부권 휴양힐링거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장에 관광인프라 조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양극화 해소 및 국내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의 문화관광도시 선정 등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li> <li>- 노후 관광시설 재생 등 지방도시 관광거점 조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관광시장 확대 및 인프라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관광시장 규모 확대</li> <li>- 관광수용태세 개선</li> </ul> </li> <li>• 문화관광도시 육성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관광활성 계획수립</li> <li>- 노후관광지 관광매력성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관광시장 활성화계획 수립</li> <li>• 숙박시설 매력성 강화</li> <li>• 도심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심관광특구 지정계획 수립</li> <li>• 국립공원 등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국가사업으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산업 통한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관광기업 육성</li> <li>- 숙박시설 등 서비스인력 양성·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대표관광콘텐츠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순례대회 등 종교관광 활성화</li> <li>• 음식관광, 학습관광 콘텐츠 개발</li> <li>• 창조관광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산업의 융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및 한류 등과 접목한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중심 관광산업 일자리 적극 육성</li> <li>•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통한 관광산업의 고도화전략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인공방촌 등 문화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li> <li>• 벨류 투어리즘 육성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관광, 학습관광 육성계획</li> </ul> </li> </ul>

- 국정기조와 전북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과제
-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신규 반영해야할 과제

## 아젠다 6

#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어촌 삶의 질 개선

## 1.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 ■ 농식품의 6차산업화, 종자·식품산업의 첨단산업화·미래준비를 위한 농업의 신성장동력화

- 농식품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 소규모 농가공 활성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법규제정, 향토산업 육성위한 특화농공단지 확대, 마을공동체 중심 농촌 관광·체험활성화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농촌의 인구유지와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한 귀농·귀촌지원법을 2013년 제정 목표로 추진 예정
- 종자, 식품, 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농식품을 최첨단 산업으로 육성
  - 종자강국 도약 위해 김제의 민간육종단지조성 및 20개 유망종자 개발 Golden Seed 프로젝트(2012~2021, 4911억원) 추진, 농식품 R&D 확충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글로벌 첨단식품산업 육성 추진
- 가축분뇨 자원화, 생산·유통구조 선진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 안전·주거·교육·의료 등 농어촌 복지 확충·자생적 발전역량 강화

- 농어촌 여건과 특성 반영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 확충 및 도시수준의 주거·의료 인프라 구축
  -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2013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법령 개정, 노인·취약계층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생활홈 조성 등을 적극 추진
  - 도시가스 보급 지속 확대, 농어촌보건기관 인프라 확대, 농어촌교육지원 법률(특별채용제, 특수고 우선 설치) 제정을 적극 추진, 농어촌 주거·의료·교육여건 개선 위한 현해 '삶의 질 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농어촌 주민 주도 지역개발,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 색깔있는 마을 5000개소 육성, 귀농·귀촌인과 재능기부자와 함께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추진, 체계적인 농촌개발을 위해 '농어촌 리모델링 특별법', '지속가능한 농어촌만들기 지원법' 등 제정 추진

### ■ 농어가소득 경영안전망 확충 및 FTA 지원 내실화·실질적인 농어가소득 증대 정책 추진

- 농어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쌀·밭직불의 단가인상 및 제도개선 추진
  - 쌀고정직불금은 단계적으로 인상(2012년 ha당 70만원 → 100만원), 밭직불제는 연차적으로 지원품목과 지목제한 해제,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작물도 밭직불 대상에 포함,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격 시행
- 농업인의 농자재비 절감위해 농자재유통센터(3개소) 설치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소 확대, FTA 추진대책 관리를 위해 FTA성과관리시스템 구축(2013)

### ■ 생산자조직 중심 유통계열화·직거래체계 구축·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소비자 상생구조 마련

-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 축소(6단계 → 3·4단계)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 도축·가공·유통 일괄담당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 로컬푸드, 생협 등 신 유통경로 확산을 통해 직거래 비중을 (2011)4%에서 (2016) 10%로 확대
  - 로컬푸드, 파머스 마켓 등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직거래법' 제정 추진, 소비자·생산자 주도형 직매장 설립

## 2.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 ■ 골든시드클러스터, 글로벌식품클러스터 구축...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정책에 적극적 대응

- 정부는 농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최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종자산업과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제시. 이들 사업은 전북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정과제에 발 맞추어 사업의 확대와 내실화 추구
  - 2015년에 완공되는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각각 종자산업 육성과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의 핵심대책으로 전북이 핵심거점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
  - 예) 민간육종연구단지 조기 완공(1단계) 및 규모 확대(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조기 조성, 세계적 식품기업유치 활동, 네덜란드·덴마크 등 세계적 식품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 ■ 농자재클러스터, 새만금 수출원예단지 조성...국정과제 연계 농식품 국책사업 적극 발굴

- 정부는 수출농업 육성 정책과 농자재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새만금을 국내 최대의 수출원예단지로 육성하고, 김제의 종자와 농기계클러스터를 확대·연계하여 농자재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적극적 추진 필요
  - 예) 새만금 수출원예단지 조기 조성, 간척지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소 설립,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자재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농자재클러스터 구축

### ■ 전북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화 및 확산...전북 사업의 국가사업화 추진

-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향토산업마을만들기, 농식품 6차산업화, 귀농귀촌센터사업 등이 국가 시책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체계화하고 확산
  - 예) 가공중심의 향토산업마을, 생산-가공-관광이 연계된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 등이 국가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전북 로컬푸드 활성화...정부의 유통구조 선진화정책 선도

- 농가 특성 고려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유통활성화 정책 추진 : ①중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중심의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②중소농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전북형 로컬푸드 정책 추진
  -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8개 시·군, 공동선별·출하작목반 27개 육성, 로컬푸드 생산기반(비닐하우스 10동) 및 직거래 매장조성(2개소)

■ **직접 지불제 확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정부의 농가소득안정화정책에 적극 대응**

- **발경작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전북도 수준으로 밭직불제가 개선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직불금 목표가격을 상향조정하도록 요구**
  - 쌀고정직불금의표가격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밭직불관련 26개 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 및 지목제한 조기철폐
- **농기계 임대료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일손부족 해소**
  - 2013년 농기계임대사업소 5개소 설치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준비 필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특징	국정과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산업육성, 농가공 활성화</li> <li>- 종자산업 육성, 글로벌식품산업 육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첨단산업화 정책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자산업, 식품산업의 거점화</li> </ul> </li> <li>• 국정과제 연계 농식품 국책사업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자재, 수출농업 등 신(新) 국책사업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생적 농어촌발전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농인·취약계층 위한 공동생활촌 조성</li> <li>-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색깔 있는 5,000개소 마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마을만들기 사업의 국가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화 및 확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가소득경영상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밭 직불제 인상 및 제도개선</li> <li>- 농자재센터 설립,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경영비 절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농가소득안정화 정책에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지불제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축협 중심 유통계열화</li> <li>- 로컬푸드·생협 등 직거래활성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전북 로컬푸드 활성화</li> </ul> </li> </ul>

- 국정기조와 전북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과제
-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신규 반영해야할 과제

## 아젠다

## 7

## 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 1.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수요충족 수단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시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전 산업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
  - 협동조합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기존 복지정책 및 일자리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체계 강화를 촉진하고자 함
-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 확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 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
  - 이를 통해 청년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개선하고 보육, 의료, 자화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 ■ 협동조합, 누구나 쉽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연계된 정책과제 발굴

- 권역별 중간지원조직과 온라인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컨설팅 및 정보관리에 중점
  - 관련 교육·홍보 및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컨설팅과 감독업무 등을 지원
- 기존 일자리·복지정책과 연계성을 제고하는 정책과제 발굴을 관계부처를 포괄하여 추진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타 법인과의 차별해소, 제도개선과제 발굴 (7월 발표예정)
- 협동조합법 개정과 정책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장기정책 비전 수립
  - 원활한 신고·인가 개선을 위한 법개정과 민관협력의 정책심의회 운영, 정책비전 제시

## ■ 사회적기업, 활동범위 확대와 자생력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창업지원 강화

-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목적 판단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 추진
  -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검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활성화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유도
-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 개선, 민간자본시장 확대, 판로지원 확대 등 추진
  - 인건비 지원의 단계적 축소, 투자펀드 확대(클라우드 펀딩, 정책자금), 공공연계 판로지원 등
- 청년 및 고령자의 사회적기업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
  - 청년 사회적기업가 단계별 육성 프로젝트, 전문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취업 지원 등

## 2.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 ■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마을기업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통합전략’ 수립

- 국정과제의 방향은 개별 정책과제로 분산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충족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특징
- 이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은 정책 간 연계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며, 지역단위에서는 자활, 마을기업 등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
- 이를 위해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엮어내어 지역순환경제 구조를 만드는 전략을 ‘전북형 사회적 경제’ 로 수립
  - 도내에는 약 5천여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 중이며, 매출액은 연 1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 조직의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통합형 전략이 요구(2012년, 협동조합 자원조사결과)

### ■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통합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부서별 업무연계와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이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정책구현을 위해 전라북도의 정책부서의 업무를 연계하는 통합행정 체계 구축이 요구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협동조합)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의 관련업무를 단일부서(과단위)로 통합하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
- 도민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내에 기 설치된 전북순환경제지원센터가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사업 및 활동을 확대

### ■ 생활 속의 사회적 경제를 진흥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학교교육+성인교육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을 개발하고 개설하여 확대 추진해나갈 방침
  - 협동조합은 일반교육, 대학원 강좌 개설 등이며, 사회적기업은 초중등 교과과정 반영, 대학·대학원 과목 개설, 대학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 주요내용
- 도내 대학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사회적 경제 대학원 과정’ 을 개설
- 이와 함께 초중등 학교교육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특성화 교육을 선도적으로 도입
  - 초중등 사회적 경제 특성화 교육은 ‘교재개발(13년 상반기) → 교사교육(13년 하반기) → 시범실시(14년) → 교육확대(15년)’ 의 단계로 추진

## ■ 협동조합 활성화를 촉진할 제도(조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협동조합 촉진 조례(현재 입법예고 중)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명문화
  - 조례는 지자체의 협동조합 사무집행의 근거가 되며, 기본계획, 민관협력, 지원기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근거를 명문화
- 중앙정부가 설치할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대응하여 '전라북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민관협력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
  - 협동조합정책심의회는 관련부서, 시·군, 기존 협동조합, 시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공동 정책논의를 하는 정책기구로 기능
- 행정은 신뢰를, 민간은 실천력을 입증하면서 협동조합의 민관 협력적 파트너 체계를 구축

## ■ 협동조합이 필요한 분야를 개발하고, 기존 정책과 연계하여 유망분야 설립을 유도

-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7월까지)인 바, 도 차원에서 유망분야의 협동조합 비즈니스 가능 모델을 관련사업과 연계 개발
- 지역사회(도민)이 생활경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중점분야를 개발하고 협동조합 설립으로 유도
  - 사회서비스 영역 중 기존의 정책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연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분야에 집중 (사회복지, 지역아동, 농촌교육, 노인복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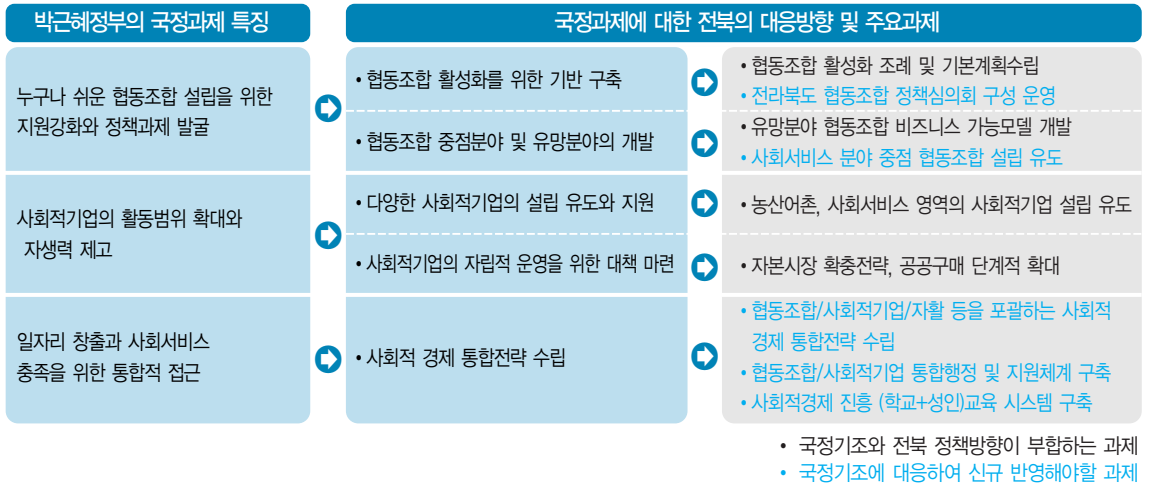
## ■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지원 활동 강화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기조의 핵심은 사회적 일자리를 더 이상 사회적기업에 국한하지 않는 데 있음
  -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전략
- 이에 농산어촌, 사회서비스, 도농교류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큰 영역과 범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활동하는 유도 정책 필요
  - 전라북도가 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교육활동과 연계

## ■ 사회적기업이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 및 판로지원 대책을 수립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키우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자본시장과 판로지원 확대하겠다는 방침
  - 민간 자본시장 확대(투자펀드, 크라우드 펀딩, 정책자금 활용 등), 판로지원 확대(민간 온오프 유통망 지원, 공공부문 공공구매 지원 등) 등이 주요내용

- 전라북도 여건에 부합되는 자본시장 확충전략(정책자금 사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크라우드 펀딩 활용)과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공구매의 단계적 확대(구매목표 설정 등)를 추진
-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매·홍보·교육·인큐베이팅 등을 위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복합공간(센터)’을 기존 조직(창업보육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설치



## 아젠다

## 8

## 지속가능한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 1.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 ■ 도로 공급체계 패러다임의 변화...효율성 및 도로개선 중심의 사업추진 활발

- 신정부 출범 이후 혼잡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충,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추진방안」(한국교통연구원, 2012)에서는 도시규모, 도로규모, 통행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통혼잡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시행 관련 도로법 일부 개정을 위하여(도로법 제 23조 2항)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2013년에 개정 예정임
  - 교통혼잡기준 마련에 따라 2020년까지 도심 내 혼잡도로에 대한 소통능력 30% 증진을 목표로 수립
- 신설사업에 비해 개량, 개선위주의 사업은 저비용의 사업으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지방지역 SOC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 ■ 교통수단별 지원을 통한 여객·물류체계 활성화...육송·철송·해송분야 지원정책 마련

- 해양자원 및 여건을 활용한 물류체계 구축 및 선진화
  -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 물류기능만 수행하던 항만배후단지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항만을 중심으로 관련 해양산업, 연구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선원공제제도 도입, 선박배출 온실가스 저감 및 평형수 처리설비를 위한 R&D추진 등을 통해 선박관리산업 육성
  - 해운보증 제도 및 선원공제제도(2013년 법률제정 추진예정), 크루즈육성지원 및 해양경제 특별구역(타당성 검토 및 법류안 마련 예정), 글로벌 물류기업 금융지원(보험요율에 대한 검토) 등 실질적인 해운·물류사업 선진화 추진
-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를 목표로 하여 기존 공로수송을 담당하던 영세 운송업 지원을 통한 교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
  - 택시(택시연료 다변화), 화물 운송업(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검사수수료 절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안 마련 노력
  - 버스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버스 전산망 통합서비스)

### ■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모든 도로이용자를 배려한 교통서비스 제공

- 기존 차량중심의 도로체계를 탈피해 도로이용자 중심의 도로체계가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대중교통,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공급이 강조될 전망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후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전망
  - 전국 시내버스의 41.5%의 저상버스 공급비율 확대 도입,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보급대수 100%달성을 위한 보급추진

- OECD 수준에 걸맞은 교통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안전 평가 및 개선사업 추진
  - 기추진되던 사고잰은곳 개선사업 지속적인 추진, 교통안전시설 지속확충,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체계 확립
  - 2020년 교통안전수준 OECD 10위권 목표 추진
- 차세대 ITS 도입을 통해 시설과 이용자간의 교류활성화 및 도로 효율성, 안전성 증진 도모

## 2.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 ■ 낙후한 도로교통체계 개선...혼잡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토대로 대응전략 마련

- 전라북도는 부족한 교통SOC로 인해 낮은 지역낙후도 순위 유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 SOC 공급은 필요하나, 지방지역에 불리한 사업경제성 논리 외에 사업추진논리 개발 필요
  - 도로혼잡, 도로안전 및 사고, 지역주민 의견,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등 경제성 논리를 탈피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 필요
  - 예) 3차 국도 국지도 사업 수행 시 국도 13호선 임실~장수구간은 교통사고 위험도 평가에서 “위험”등급으로 분류되어 사업추진이 확정됨
- 동고서저의 지형적 여건에 의해 단절된 동서지역간 통행 실태를 분석해 도로체계의 불합리성을 정부에 건의. 교통 SOC 낙후지역이 많은 지방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도로 사업 발굴
  - 예) 「경기도 고속도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방안」(경기개발연구원, 2010)에서는 경기도내 지역들의 고속도로 접근 시간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통행 효율성 및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전라북도는 도로 연속성의 부족으로 인한 다수의 병목구간과 지형여건에 따른 선형불량으로 인한 혼잡 및 사고가 존재함.
- 변경된 교통혼잡기준을 활용하여 혼잡구간을 선정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 개선사업 시행
  - 예) 전주~익산~군산 연담도시권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 시행
- 새만금 개발계획에 대비해 다수 도로를 건설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여건분석 결과 일부구간은 여전히 열악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예)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호남 및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가능 구간 검토

### ■ 국가정책 주요내용, 친환경 녹색교통...수단별 화물수송체계 지원

- 지속적인 철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도로중심의 수송체계는 79.6%의 점유율로 지속되고 있으며, 철도수송은 5.0%로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그침. 특히 2014년 호남고속철도 완공 이후 전라북도 철도사업 계획은 없어 화물수송 지원을 위한 인입철도 도입을 통해 SOC사업 추진 및 녹색교통 활성화 도모필요
-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계획 외에 군장산업단지, 완주테크노벨리, 완주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이들의 지원을 위한 시설계획의 선제적 수립

- 예) 항만 철도인입선은 부산, 광양, 마산, 목포, 울산, 목호, 여수, 인천, 장항 총 9개지역에서 운영 중. 전라북도 지역 항만에 대한 추가지원 건의를 통해 인입철도 사업 추진(군산항, 새만금신항)

○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기반으로한 해운수송 체계 구축 및 수단간 연계강화(Intermodalism)

○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육로 화물수송분야 근로여건 개선 사업 지속적 추진

- 예) 기추진 중인 군산, 정읍, 남원, 완주, 고창 지역 화물공영차고지 및 부대시설 확충계획 지속적 추진

- 예) 재원확보 및 국고지원을 위한 광특계정 변경 요청 및 이를 통한 화물수송 지원 활성화

■ 전라북도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보장 필요...인간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의 시행

○ 정부는 2016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목표를 47% 수립. 전라북도는 현재 39.4%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어 정부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마련

○ 특히 전라북도는 대부분 지역이 초고령화사회로 대중교통 서비스 필요하지만, 평균승차인원이 2.62명/회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벽지노선이 다수

- 예)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전주는 고령화사회 완주군은 고령사회. 나머지 지역은 초령화사회임

○ 통행의 기본이 되는 보행을 통한 이동권 보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무장애설계기법 적용사업 추진을 통해 보행권 모범도시 추진

■ 첨단교통체계 구축...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 교통사고 심각도 측면에서 전국 최하위의 전라북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수행 필요

- 예) 전라북도 사고DB구축 → 안전성위험 구간 분석 → 대응전략 수립 → 개선사업시행 → 모니터링

○ 신정부 주력사업인 교통안전점검, 사고찾은곳 개선사업 등 안전개선사업 활성화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도로효율성 증진 및 연계교통망 강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특징	국정과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도로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잡도로 확충 및 개선</li> <li>- 지역균형 발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혼잡구간 선정 및 개선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혼잡구간, 고속도로 혼잡구간, 병목구간, 장래 소통열약구간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수송체계 개선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자원을 활용한 물류체계 활성화</li> <li>- 수송수단별 연계 강화</li> <li>- 영세 운송업자 지원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자원을 활용한 수송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li> <li>• 친환경 녹색교통, 철도사업 추진</li> <li>- 인입철도 확충</li> </ul> </li> <li>▶ 영세 운송업자 근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행료 할인, 공영차고지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실현</li> <li>- 안전한 도로체계 구축</li> <li>- 첨단교통체계 도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복지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 고려</li> </ul> </li> <li>▶ 교통안전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사고 특성 분석</li> <li>- 안전개선사업 지속추진</li> </ul> </li> <li>▶ 첨단교통체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ITS 사업 추진</li> </ul> </li> </ul>

- 국정기조와 전북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과제
-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신규 반영해야할 과제

# 아젠다 9

## 지역성장 거점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

### 1.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 ■ 경제권과 생활권을 연계하는 주민체감형 국토발전정책...도시권 중심의 지역성장거점 육성

-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의 핵심은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 10+ $\alpha$ 중추도시권에 대한 도시규모, 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 추진일정: 「도시권 육성전략」마련(2013.상) 및 도시권별 특화전략 확정(2013.하), 도시권별 핵심 프로젝트 선정(2013.10) 및 지원(2014~), 「도시권육성특별법」제정 추진(2014.상 국회제출)
- 국토해양부는 인수위에 「지방거점도시(10+ $\alpha$ )의 지역중추도시권」 실천계획 보고
  - 주요내용: 10+ $\alpha$ (대전·대구·부산·광주권, 6+ $\alpha$  중소도시권)을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
-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상생포럼에서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 발표(2012) 및 인수위 건의
  - 대도시권: 광역시와 인근 지역과 경제·생활권 고려 설정
  - 중소도시권: 인구규모, 인근지역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 고려 설정
  - 사업내용: 도지재생, 연계교통망 확충, 교육·의료·문화기반 정비
- 지역미래산업을 위한 특화산단 조성 및 지역산업육성체계 효율화,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와 행복한 산단만들기 사업(QWL) 연계 그리고 산단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 추진
- 섬진강 주변으로 영호남간 산업융화와 문화교류, 연계도로망 확충을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자원 비중 확대 추진

-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자체자원 비중 확대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자체자원 비중 확대를 위하여 지방소비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 향상 추진
  - 지방세원을 기존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간판 관련 부담금 등 신세원 도입 검토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추진

#### ■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제도 개선 추진

- 지방자치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향상되었으나, 핵심 권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보유한 채 정책이 집행
  -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예측화 현상 지속

-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 국가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주요정책에 대한 중앙-지방간의 충분한 협의와 상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 2.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 ■ 전북 중추도시권인 전주권 발전전략 추진...지역성장거점 기능 강화 대응 필요

-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을 추진중이며 5월과 6월 의회 의결과 주민투표로 결정 예정
  -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인구 및 경제규모, 행정체계 등에서 경쟁력 확보 및 지역성장거점 기능 강화 예상
- 새만금개발로 인해 향후 거대 연담도시권으로 발전 가능성 기대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 육성 포함(2013.2월 국토부 승인)
- 전북의 지역성장거점으로 전주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도시권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권 특화전략 및 핵심 프로젝트 선정과정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지역성장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간 연계 및 대중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

### ■ 지역 특화산업 개발 및 노후 산업단지 재생...산업경쟁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필요

- 지역의 산업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지역의 창조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 조성 필요
  - 전북의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비중이 높으며,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부족. 따라서 현재 경쟁력이 높은 지역 산업과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략산업 중심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추진 필요
- 신규 산업조성도 중요하지만 노후산업 비중이 높은 전북의 경우 산업재생과 행복한 산업만들기(QWL) 적극 추진 필요
  - 기존 노후산단에 대한 재생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

### ■ 섬진강 인근 동서통합지대 조성 적극 대응...섬진강 상류인 전북지역까지 확대 추진

-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섬진강의 발원지이자 상류인 전북지역까지 포함하는 초광역적 사업으로 추진 되어야만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가능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동서통합지대는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으로 명시
  - 동서통합지대는 섬진강 하류에 대한 항공우주산업 연계 발전과 지역 특산물 공동마케팅, 문화예술지대 조성 연계 관광기반 확충 그리고 해수화 방지 등의 사업 제시
- 동서통합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및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도 추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비중 확대...전북 자체재원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기본적으로 전북의 자체재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우선 모색
  - 2011년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원 부족 등의 이유로 26%에 그쳤으며, 이는 최하위인 전남에 이어 하위 두 번째(전국 평균 52.3%)
  - 국토 공간상 각 지역들의 지역발전 수준을 고려한 국토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 시행 등)
- 전북의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 및 정치권과 공동 대응 필요
  - 지자체 자체재원 비중 확대(지방소비세 인상 등)를 위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치권 등과 공동 대응 추진중

■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대응...타지자체 및 정치권과의 공조 대응 필요**

-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타 지자체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박근혜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재정 제도 개선,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건의(2013.1.31, 2013.2.6)
  -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차원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및 추진 중단 등 8개 과제 건의(2013.2.6)
- 국회, 중앙정부 등의 지방분권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 파악 및 지속적 대응 필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특징	국정과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권 중심의 지역성장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중추도시권 육성</li> <li>- 특화산단, 산단재생, QWL, 정주여건</li> <li>- 동서통합지대 조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지역성장거점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완주 통합</li> <li>- 도시권 내 지역간 연계 인프라 구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재원 비중 확대</li> <li>-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li> <li>- 지방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산업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신규 산업용지 공급</li> <li>- 산업 및 노동 환경 개선</li> </ul> </li> <li>• 동부권과 동서통합지대 조성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연산업 연계</li> <li>- 동부권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방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분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 개정</li> <li>-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 및 상생 발전 공동 대응</li> <li>• 지방 자체재원 확대 추진</li> <li>•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중추도시권 설정 및 세부전략 수립</li> <li>• 전북 산단 특화전략 방안 마련</li> <li>• 전북 노후산단 재생 및 QWL 향상 국가 지원 사업 추진</li> <li>• 동서통합지대를 전북 동부권 포함 확대 조성 추진</li> <li>•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 공동 대응(지역균형발전협의회)</li> <li>•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전국시도지사협의회)</li> <li>•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전국시도지사협의회)</li> </ul>

• 국정기조와 전북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과제  
 •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신규 반영해야할 과제

# 아젠다 10

## 안전한 사회 및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 1. 국정과제 기조 및 특징

#### ■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구축...국가 안전망 강화

- 신정부는 안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망 구축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의 4대 폭력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통한 안전체감도 향상 정책 추진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인권강화, 치유 및 재활 지원 체계 구축, 범죄예방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생활 및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 기후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강화 및 선진방재대책 마련
  -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풍수해종합저감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 대비 방재기준 재설정 등 구조적 대책을 적극 추진
  - 자연재해의 사전대비 및 사후 대책으로 기상예측을 통한 기후예보체계를 강화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예경보체계 구축 및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등 비구조적 대책 추진
- 에너지시설 및 유해화학물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 구미 불산사고 이후 정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령 미비·보완 사항, 화학물질 관리체계 누락사항, 관리·감독 실태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원자력 안전 구현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

#### ■ 녹색성장에서 지속가능한발전으로...사회적 요소 통합

- 신정부는 경제-환경의 선순환을 강조한 녹색성장의 정책패러다임에서 환경-경제-사회의 3요소가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 핵심 생태축 보전, 대기오염 총량강화, 물순환 및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
- GCF(녹색기후기금) 유치에 따른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 역할 강화
  -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2015년)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전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화 기반 확충
  -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뒷받침하고, 전력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적 스마트그리드(전력공급기술+정보통신기술) 기반을 구축할 계획

## 2. 전북의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향

### ■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CCTV통합관제망 확충

-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 방안 마련하고 기추진중인 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인 노력 추진
  - 전라북도 범죄 발생은 58,570건(2011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3.4%로 지속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2011 범죄통계)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개선 필요
  - 생활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는 전국에 2012년 131,623대가 설치되었으며 2007년(44,626대) 대비 295%가 증가하였음. 전라북도는 3,391대가 설치되어 전국대비 2.6%에 불과(전국 12위)하여 안전에 취약한 상태임
  - 학교 CCTV 설치현황을 보면 대부분 전국 지역의 학교가 CCTV 설치(100%)되어 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설치율이 85%에 불과하고 1교당 평균설치대수도 7대로 경기도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임(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2)
  - 폭력피해 치료·재활 지원체계 구축, 보호시설 확충, 불량식품 근절 대책 추진,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아동 인권 및 아동안전강화, CCTV 통합관제망 구축 필요

### ■ 풍수해 대응 사전예방체계 구축...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추진

-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의 구조적 대책 수립과 함께 기후예보체계 강화, 홍수위험지도 작성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 마련
  - 전라북도는 25년간(1986~2010) 자연재해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14,504억으로 전국 총 피해액의 약 4.9%를 차지
  - 최근 10년간 총 피해액은 10,289억으로 10년간 전국 총 피해액 170,441억 원의 약 6.0%를 차지하여 광역 지자체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게 집계되어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 증가

### ■ 유해물질 안전관리 체계강화...유해물질관리 현황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전라북도 차원의 유해물질 관리제도 대응현황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응 전략 수립
  - 유해물질관리 주체와 유해물질 사업장 주체가 상이하고, 관련법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기관의 신설이 요구되며, 화학물질관리는 국가 간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적극적 대책 필요

###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거버넌스 강화 및 환경(생태, 물, 폐자원 등)산업 육성

- 생태관광 활성화, 생태축 조성을 통해 전라북도 특색에 적합한 생태축 보전/복원 프로그램 및 생물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
  - 전라북도는 생태/생물자원의 현황조사 및 분석이 부족하고 분산된 자원 간 연계성 낮으므로 지역자원의 보전-복원-이용 방안 도출
-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지류지천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 주민이 참여 하는 거버넌스 프로그램 강화

- 전라북도의 상수도보급률은 92.1%(전국평균 95.3%)로 시지역 95.3%, 군지역 77.7%(2010년 기준) 등 생활환경의 지역간 격차가 있으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현실임

○ **관리중심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물순환과 자원순환을 기반한 환경산업 육성 필요**

- 물순환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지능형물관리(Smart Water Grid) 실증단지를 구축하여 국가 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조성 필요
- 전라북도는 전국최초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전주)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부산물 재이용을 위한 생태산업단지(EIP)를 구축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잠재력 높은 지역

■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녹색생활 교육·홍보 강화 및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제도(배출권거래제 등) 지원 및 도민 교육·홍보를 통한 의식 및 생활패턴 변경 유도
- 이미 진행중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적응대책 수립 및 추진 필요
  -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생태계, 물관리, 해양·수산업 등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부는 기초지자체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적응대책 계획수립 지원

■ **전라북도형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마을만들기와 협동조합과 연계**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라 전라북도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을 위한 보급활성화 대책이 필요
  - 전라북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이나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8위, 1인당 석유 소비량 8위, 1인당 전력소비량 6위, 전력자립도 11위 수준(2011년 기준)
  - 에너지 자립마을과 같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발전소 확대 모색을 통해 전라북도형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창출 필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특징	국정과제에 대한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li> <li>-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추진</li> <li>- 유해화학물질 및 에너지시설 안전 관리 체계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일센터 설치 및 CCTV통합관제망 확충</li> </ul> </li> <li>• 풍수해 대응 사전예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추진</li> </ul> </li> <li>• 유해물질 안전관리 체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관리 현황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망 구축</li> <li>•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의 구조적 대책 추진</li> <li>•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의 비구조적 대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축 보전, 물순환, 자원순환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구</li> <li>-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li> <li>-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시장창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 강화 및 환경(생태, 물, 폐자원 등)산업 육성</li> </ul> </li> <li>•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생활 교육/홍보 강화 및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li> </ul> </li> <li>• 전라북도형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만들기와 협동조합 연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차원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현황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li> <li>•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생태, 수질, 자원순환 거버넌스 강화</li> <li>• 생물자원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생태자원 활용</li> <li>• 물순환, 자원순환에 기반한 환경산업 육성</li> <li>•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li> <li>• 진행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 적응대책추진</li> <li>• 에너지자립마을, 협동조합 발전소를 통한 에너지자립을 향상</li> </ul>

- 국정기조와 전북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과제
-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신규 반영해야할 과제

〈별첨〉 국정과제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종합)

전북대응전략	국정과제특징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창출, 민생중심의 창조경제 기반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조경제 생태계 조성</li> <li>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li> <li>취업지원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고부가가치화</li> <li>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li> <li>투자유치의 확대</li> <li>청년층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li> <li>글로벌 강소기업 육성</li> <li>청년창업가 육성</li> <li>전통시장 활성화</li> <li>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li> <li>중장년층 취업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 서비스산업 특화사업 발굴</li> <li>대중소 기업간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li> <li>전북 주얼리산업 클러스터 구축</li> <li>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li> <li>청년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li> <li>전북 강소기업 육성위한 자원체계 구축</li> <li>대학의 희망창업 기지화</li> <li>전통특화시장 지속적 육성</li> <li>전북 일자리센터의 기능 강화</li> <li>중장년층 전직 및 고용유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성기반 융합산업으로 성장동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도적 기반 구축강화</li> <li>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li> <li>신미래성장산업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유치 가능한 사업선정 대응</li> <li>전북사업의 국가사업화</li> <li>R&amp;D 역량 강화</li> <li>새로운 성장동력 발굴</li> <li>전라북도 이미지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산업창조프로젝트, 국민행복프로젝트 등 창조산업 관련 사업 선제 대응</li> <li>탄소복합재 생산거점 구축</li> <li>식품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li> <li>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조성</li> <li>뿌리산업 공동활용 파일럿 플랜트 구축</li> <li>지역 과학기술 역량강화사업</li> <li>IT융합혁신센터 유치</li> <li>의료 융합기술 연구중심병원 및 최고강산업 연구지원센터 유치</li> <li>동서의료기술 R&amp;D 및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구현과 전북형 복지전달체계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정책내용 차별화와 다양화</li> <li>사회복지정책 대상 및 지원내용의 확대</li> <li>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의 분류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li> <li>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정책수요 분석 및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li> <li>반공정체 전달체계의 탈빈곤 확대 중심으로 개편</li> <li>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활성화</li> <li>양질의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 개발</li> <li>특성화교육 확대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li> <li>도농복지격차 해소와 농촌복지전달체계 개편</li> <li>읍면동 중심 도입 체감형 복지전달체계 수립</li> <li>고용+복지 연계 복지전달체계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복지예산 편성 및 복지사업 분류</li> <li>전북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모형 구축</li> <li>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노인일자리아산 치등보조를 상향 조정 제시</li> <li>급여형태별 정책수요 분석 및 성과별 정책목표 수립</li> <li>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광역화</li> <li>농촌지역 공보육 인프라 확충</li> <li>권역별 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센터 설치 운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검토</li> <li>학교-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의 역할 및 기능조정과 사업연계</li> <li>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성과관리제 도입</li> <li>마이스터고·특성학교 확대</li> <li>산·학·관 커리큘링 사업 확대</li> <li>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전북평생학습진흥원 설립, 지역 행복평생학습센터 설치</li> <li>마을회관 경로당 중심 복지시설 복합화 방안 제시</li> <li>농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중앙정부 시범사업 연계</li> <li>읍면동 중심 보건복지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수립</li> <li>협동조합 전환 가능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육성</li> <li>광역자활센터 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원 전담부서 신설</li> <li>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부 설립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질 확대와 문화주도 지역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격차해소 및 지역문화창출</li> <li>문화유산의 활용 정책 본격화</li> <li>법제도적 기반구축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 삶의 질 주요 시책, 국가사업화</li> <li>문화일자리, 문화매개인력 적극 양성</li> <li>제2한옥마을 위한 문화도시, 문화마을</li> <li>순수예술, 인디장르 종합지원계획 수립</li> <li>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li> <li>무형문화유산의 수도 조성전략 추진</li> <li>재정추진 법률안 검토, 전북유치 가능한 사업선정 선(先)대응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질 5대 시책(특히 시민예술촌,작은영화관) 국가사업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li> <li>권역별 체류형 의료문화관광 클러스터 유치, 조성</li> <li>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사 양성 확대 및 관리체계 구축</li> <li>13개(전주 제외) 문화도시 선정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li> <li>읍면동별 문화마을 선정 추진</li> <li>인디뮤지션 음악창작소 조성</li> <li>장애인 예술창작지원센터 건립</li> <li>국립박물관 승격 전북안 마련</li> <li>무형문화유산 수도 전략 마련</li> <li>한국학·정신문화 관련 호남지역 거점기관 설립 검토</li> <li>전통문화 법률(무형문화유산법,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산업의 융복합화와 경쟁력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균형</li> <li>관광양극화해소 및 국내관광 활성화</li> <li>관광산업일자리 창출</li> <li>관광산업의 융복합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북형 전략관광산업 육성</li> <li>관광복지 선도사업 선도적 추진</li> <li>미래관광시장 확대 및 인프라 개선</li> <li>문화관광도시 육성계획 수립</li> <li>전라북도 대표관광콘텐츠 개발</li> <li>청년중심 관광산업 일자리 적극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ICE, 한류문화관광산업 육성</li> <li>동부권 휴양힐링거점사업 추진(무장애 관광인프라 조성)</li> <li>중교관광시장 활성화계획 수립</li> <li>숙박시설 매력성 강화방안</li> <li>도심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심관광특구 지정계획 수립</li> <li>국립공원 등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국가사업으로 추진</li> <li>세계순례대회 등 중교관광 활성화</li> </ul>

전북대응전략	국정과제특징	전북의 대응방향 및 주요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통한 관광산업의 고도화전략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음식관광, 학습관광 콘텐츠 개발</b></li> <li>• 창조관광기업 육성 - 관광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li> <li>• 장인공방촌 등 문화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li> <li>• 벨류 투어리즘 육성방안 마련 - 문화예술관광, 학습관광 육성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 및 농어촌 삶의 질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화</li> <li>• 자생적 농어촌발전역량 강화</li> <li>• 농어가소독경영안전망 구축</li> <li>•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첨단산업화 정책 선도</li> <li>• 국정과제 연계 농식품 국책사업 적극 발굴</li> <li>• 전북 마을만들기 사업의 국가사업화</li> <li>• 정부의 농가소득안정화 정책에 적극적 대응</li> <li>• 정부의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 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든시드클러스터 구축</li> <li>• 글로벌식품산업 거점 구축</li> <li>• 김제·새만금 수출원예단지</li> <li>• 농자재클러스터 구축</li> <li>•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 설립</li> <li>• 가공형 향토산업마을</li> <li>• 생산-가공-관광형 6차산업화</li> <li>• 협력체계구축: 마을만들기센터, 귀농귀촌센터</li> <li>• 발직불제 전문목 확대</li> <li>• 쌀직불금 목표가격 상향</li> <li>• 농기계임대사업소 5개소 확충</li> <li>• 통합마케팅조직 육성</li> <li>• 공동선별출하작목반 육성</li> <li>•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쉬운 협동조합설립을 위한 지원강화와 정책과제 발굴</li> <li>• 사회적기업의 활동범위 확대와 자생력 제고</li> <li>•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충족을 위한 통합적 접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li> <li>• 협동조합 중점분야 및 유망분야의 개발</li> <li>•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유도과 지원</li> <li>• 사회적기업의 자립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li> <li>• 사회적 경제 통합전략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및 기본계획수립</li> <li>• 전라북도 협동조합 정책심의회 구성 운영</li> <li>• 유망분야 협동조합 비즈니스 가능모델 개발</li> <li>• 사회서비스 분야 중점 협동조합 설립 유도</li> <li>• 농산어촌,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기업 설립 유도</li> <li>• 자본시장 확충전략, 공공구매 단계적 확대</li> <li>• 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통합 전략 수립</li> <li>• 협동조합/사회적기업 통합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li> <li>• 사회적경제 진흥 (학교+성인)교육 시스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도로체계 구축</li> <li>• 화물수송체계 개선 및 지원</li> <li>•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혼잡구간 선정 및 개선사업 시행</li> <li>• 해양자원을 활용한 수송체계</li> <li>• 친환경 녹색교통, 철도사업 추진</li> <li>• 영세 운송업자 근로여건 개선</li> <li>• 교통복지의 실현</li> <li>• 교통안전체계 수립</li> <li>• 첨단교통체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혼잡도로 시범사업 선정</li> <li>• 고속도로 혼잡구간 도로확충 사업</li> <li>• 항만시설 연계강화를 위한 물류거점정보시스템 도입</li> <li>• 항만, 산업시설 입입철도 타당성 검토</li> <li>•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안마련(광득계정 변경 요청)</li> <li>• 부대시설 확충을 통한 여건개선</li> <li>•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방안 확대 및 시행방안 검토</li> <li>• 무장해설계기법도입 시범사업 추진</li> <li>• 전라북도 도로망사고 DB구축 및 안전성평가 방안 수립</li> <li>• 사고찾은곳 개선사업 지속추진</li> <li>• 연담도시권 C-ITS 사업 확보</li> <li>• 전북권(전주, 군산, 익산, 김제) UTIS 공모 선정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성장 거점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권 중심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li> <li>•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li> <li>• 지방분권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지역성장거점 기능 강화</li> <li>• 지역산업 기반 확충</li> <li>• 동부권과 동서통합지대 조성 연계</li> <li>• 지역균형 및 상생 발전 공동 대응</li> <li>• 자체재원 확대 추진</li> <li>•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li> <li>•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중추도시권 설정 및 세부전략 수립</li> <li>• 전북 산단 특화전략 수립</li> <li>• 전북 노후산단 재생 및 QWL 향상 국가지원 사업 추진</li> <li>• 동서통합지대를 전북 동부권 포함 확대 조성 추진</li> <li>•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 공동 대응(지역균형발전협의체)</li> <li>•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전국시도지사협의회)</li> <li>•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전국시도지사협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사회 및 지속가능한 환경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전망강화</li> <li>•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li> <li>• 풍수해 대응 사전예방체계 구축</li> <li>• 유해물질 안전관리 체계강화</li> <li>•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마련</li> <li>•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li> <li>• 전라북도형 신재생에너지 시장정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망 구축</li> <li>•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의 구조적 대책 추진</li> <li>• 홍수위험지도 작성 등의 비구조적 대책 추진</li> <li>• 저지체 차원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현황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li> <li>• 생물자원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생태 자원 활용</li> <li>•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생태, 수질, 자원순환 거버넌스 강화</li> <li>• 물순환, 자원순환에 기반한 환경산업 육성</li> <li>•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li> <li>• 진행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차원 적응대책추진</li> <li>• 에너지저장기술, 협동조합 발전소를 통한 에너지저장용량 향상</li> </ul>

- 국정기조와 전북 정책방향이 부합하는 과제
- 국정기조에 대응하여 신규 반영해야할 과제